

국회의장 불 지피고 친문 동의...여권, 개헌 논의 시동

박병석 의장 잇단 토론회·세미나 친문일각선 다수 부총리제 거론 성과 이해 엇갈려 쉽지 않을 듯

박병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건다. 평소 지론에 따른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문 일부에서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발제자로 나와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박 의장은 오는 6월 1일께 국회 개헌 1주년을 기념해 개헌 세미나도 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권력 분산과 국민 통합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가 개헌 논의의 적기라는 판단이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의 제도로는 국민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

기 때문에 권력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곧 개헌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취임 계기로 당내 국가비전위원회가 설치되면 이를 통해 개헌 등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논의를 통해 대선 전 개헌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거나, 아니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집권 후 1년 내 개헌을 추진하는 로드맵이 거론된다.

친문 의원이 주축이 된 의원 연구모임 '민주주의 4.0' 내부에선 현재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대통령제를 국무위원과 정당 중심의 대통령제로 개선하는 방안이 아이디어로 나온다. 국무총리 외에 정당 기반의 부총리를 5~6명 추가로 두고, 이들도 국회 인준을 받게 하자는 구상이다.

의원내각제 등 대대적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현재의 대통령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친문의 이런 의견을 두고 현재 유의미한 지지를 받는 독자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이 일부 거론됐지만 만큼 대선 전 논의의 계기가 마련될



무슨 얘기 나눌까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왼쪽)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고, 당 주류인 친문도 아직 후보

가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 역시 윤석열이 제3지대로 가면 후보가 없을 수 있으니 개헌에 필요한 조건은 무리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나 각 정파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탄력 못받는 민주 대권 레이스 친문발 '제3후보론'

김경수 불투명·유시민 출마설 일축 임종석·이광재 등판설 주목

더불어민주당 대권 레이스에서 '제3후보론'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4·7 재보선 참패로 확인됐듯이 여권 전반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민주당 특유의 역동성이 약해진 것도 친문발 제3후보론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현재 '빅 3'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당내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지만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주자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제3후보로 거론됐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재판 탓에 대선 경선 레이스 참여가 불투명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최근 "장난감 취급하지 말라"며 출마설을 일축한 상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사실상 불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후,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는 점에서 제3후보가 등장할 것인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86 운동권 그룹의 대표 주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광재 의원의 등판 여부가 제3후보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임 전 실장은 지난 4·7 재보선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다 당내의 눈총을 받으면서 정치적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은 상황이다. 또 이광재 의원은 나름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고 있지만 당 내외 호응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의 대선 출마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동력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광재 의원에 대선 출마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치적 폭발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3후보가 등장할 여건은 충분하다. 민주당 내에선 친문 진영 등 현재의 '빅 3'에 마음을

주지 못한 정서가 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당내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과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탓에 친문 진영 일각에선 '비토' 정서가 남아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 미래를 이끌어갈 역동적 이미지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을 필두로 이광재·김두관·박용진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이 과연 당내 경선 구도를 뒤흔들기는 역부족이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울초 미국으로 연수를 떠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를 비롯한 '빅3'의 끈질긴 러브콜에도 '원팀' 기조를 지켜온 양 전 원장은 5·2 전당대회 이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영덕 의원 민주 원내부대표 선임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0일 "상임위원회와 전문성을 고려해 9명의 원내부대표를 임명했다"며 "경제, 안보, 문화, 법조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과 여

성, 청년 등 모든 세대와 민생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의원들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윤 부대표는 "당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민생 문제와 개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2기 원내부대표에는 강준현(충남 세종시울·국토위), 김민철(경기 의정부시울·행안위), 김병주(비례대표·국방위), 유정주(비례대표·문체위), 이수진(서울 동작구울·산자위), 임오경(경기 광명시·문체위),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울·국토위), 최혜영(비례대표·보부위) 의원이 선임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9억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20일 "재산세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이 서울에서만 30% 가까이 된다"며 "재산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높다"고 전했다. 이어 "6억원 이하는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 신속하게 감면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일단 민주당은 전남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안 등을 논의한 뒤 5·2 전

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데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인하안을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을 올해부터 덜어줄지, 내년부터 덜어줄지에 대해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현행 중부세 기준(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올려잡는 안으로,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7%에 해당한다. 다만 부과 기준을 역수(12억원)에 맞출지, 비율(상위 1~2%대)로 맞출지는 미지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 결의안 등 처리

전남도의회, 21~30일 임시회

전남도의회(의장 김한중)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5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함께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예정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22명의 의원이 나서 집행부

에 주요 현안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다.

지난 7일 보궐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순천 출신 한춘욱 의원과 고흥 출신 박선준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민병대 의원에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임시회는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